



# 대학주보

## 소수자 인권기구 학소위 존폐 기로 정치활동·예산 운용·대표성 두고 논쟁

김유경 기자 ghajfs@khu.ac.kr

【서울】지난 2일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폐지와 대안기구 설립 제언을 위한 임시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발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안건은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3일 정경대 신하균(사회학 2023) 학생회장이 중운위에 제출한 것으로, 학소위 역할, 조직 운영,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폐지 및 대안 기구 논의를 골자로 한다.

### 학소위 사업 놓고 첨예한 입장차

정경대 신 회장은 학소위 폐지 근거로 장애학생 휴게실 신설 순가락 없기 의혹, 장애인 전형 확대 및 학과 차별 폐지, 과도한 정치 참여, 예산 운용 등을 제시했다.

학소위가 SNS에 업로드했던 [장애학생 휴게실 신설 보고]와 관련해 정경대 신 회장은 "신설이 아닌, 기존 휴게실을 옆 호실로 이전한 것일 뿐"이라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복지평가 분야를 개선하고 우수 여부를 평가받고자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학소위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면담에서, 장애학생 휴게실이 센터 사무실 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열악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학소위가 함께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제캠퍼스와 타 대학 사례를 취합해 소통간담회에서 휴게실 이전 및 시설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며 장소 답사, 구비물품 조사 등 실질적 이전 계획에



지난 5일, 학소위는 정문 앞에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학소위는 "기구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을 모아 확운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하시연 기자)

참여했고, 개소식에도 학소위가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학소위가 추진하는 장애인 입학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정경대 신 회장은 "우리학교는 총 15명의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성균관대 10명, 서울시립대 10명, 중앙대 8명 등으로 타 학교보다 많은 인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학소위는 소명문에서 "고려대가 정시 모집 인원 중 36명을 장애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15명은 절대 충분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교육 불평등 해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회장은 "학소위가 언급한 고려대는 정시 선발이 중심인 반면, 우리학교는 수시 중심이기에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 "소수자 권리 보장 활동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

학소위의 과도한 정치 참여 비판에 신 회장은 "총학과 단과대 학

생회는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와 의결을 진행한다"며 "학생 자치 기구가 많은 우리학교 학생을 대변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정제된 의견을 내리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 회장은 "학소위는 의결과 논의 없이 임의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왔다"며 "학생 자치기구가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학소위의 활동을 분석해보면, 유난히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소위는 "특정 계파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이라며 "장애학생, 쿼어 등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기 어려운 소수자를 찾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끊임없이 본부 및 총학생회와 소통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규탄 활동에 대해서는 "비민주적 계엄을 규탄하는 활동을 이어나간 것은 학생총회 이후 어

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이라며 "단순히 정권 퇴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탄핵을 넘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 이후에도 혐오 정치인이 재차 등장해 소수자의 삶을 짓밟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소위가 진행한 '잔디밭 세미나' 강연자에 자치회비로 강연료를 지급한 것을 두고 "학소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연사자를 선정했고, 어떤 기준으로 강연료를 책정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학소위는 "강연자는 3년 이상의 인권 활동 등 관련 사안에 충분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대 신 회장은 학소위가 자치회비로 교외 시민단체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비판했다.

2면에 계속 →

## 수강신청 제도 개선 TF팀 출범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지난 5월, 양캠퍼스 학사지원팀을 중심으로 수강신청 제도 개선을 위한 수강신청 TF팀이 출범했다.

수강신청 TF팀에는 양캠퍼스 단과대 담당자, 정보처 학사정보팀 담당자, 학사지원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사지원팀은 "더 많은 학생이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경희교육혁신비전선포식'에서의 '총장과의 대화' 중 문과대 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학 2021) 학생회장이 수강신청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교양 과목은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전공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물었다.

이에 김진상 총장은 "학생 요구에 맞는 수강신청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성수 국제캠퍼스 교무처장은 "현재 양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서 수강신청 개선을 위한 TF팀을 가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전선포식 이후, 우리신문과 인터뷰한 김 처장은 "수강신청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선뜻 나서기 힘들다"며 "양캠퍼스 학사지원팀장이 논의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 해외 대학 등의 사례를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와 몇몇 해외 대학은 '마일리지 선택제'를 운영하는 등 선착순 클릭을 통한 수강신청과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김 처장은 "수강 좌석을 늘리는 것은 강의실 규모, 교수 채용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온·오프라인 병행 과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